

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과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

이진권** · 황욱***

본 연구는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및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여러 소득계층들의 정치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Bernhei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의 공동대리인모형에 기초하여 각 소득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치참여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중간소득계층의 가능한 전략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율 결정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이 모든 소득계층의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작은 경우(저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에 가까운 경우), 두 계층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간소득계층의 최선의 선택인 반면, 세전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큰 경우(고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주제어: 재분배정책, 소득세, 중간소득계층, 이익집단 정치, 공동대리인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38, H23, D31, D72

I. 서 론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재분배정책 시행에 있어서 관련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 결과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에서도 중간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 위치에 따라 중간계층이 재분배 문제에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전화: (02) 705-8511, E-mail: jlee22@sogang.ac.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전화: (053) 950-7430, E-mail: uh202@knu.ac.kr

논문투고일: 2013. 9. 2 수정일: 2013. 10. 9 게재확정일: 2013. 11. 7

있어서 인접 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실증분석 연구들은 다양한 소득수준을 지닌 투표자들이 소득재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이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분배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Romer(1975), Roberts(1977) 및 Meltzer and Richard(1981) 등의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소득재분배정책의 입안과정을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의하여 정치적 균형으로서 재분배정책을 설명하고 있다.¹⁾ 그러나 실제로 결정되는 재분배정책이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의 예측력은 한계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Kristov, Lindert, and McClelland(1992), Dougan and Snyder(1996), Testa(2005) 및 Zheng (forthcoming) 등 일련의 연구들은,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과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가 시사하고 있듯이, 재분배정책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재분배정책으로서 소득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득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치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에 따른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소득재분배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중간소득계층은 소득수준에 있어서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계개편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산층 증세와 관련하여 중산층을 어느 소득구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매우 주관적이며 정치적인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의 소득재분배정책의 방향은 정치

1) Meltzer and Richard(1981) 등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위투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그 사회의 평균 소득수준보다는 높은 개인을 의미하고 이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균형 소득세율이 된다. 따라서 중위투표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갖는 개인들은 높은 소득세율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위투표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개인들은 낮은 소득세율과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설명한다. Meltzer and Richard(1981)는 역사적으로 19~20세기에 걸쳐서 낮은 소득수준을 지닌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소득세율이 점차 높아지고 적극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산층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Acemoglu and Robinson(2006)에 의하면 중산층은 어떤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가 순조롭게 순항하게 만드는 완충(a buffer)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재분배 문제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중산층이 담당한다고 설명한다.²⁾ 이처럼 어느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의 존재는 그 사회가 건강한 민주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고 있다.³⁾

정부의 재분배정책 입안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논문은 1992년 Kristov, Lindert, and McClelland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유대이론(social affinity theory)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참여와 이익집단의 형성과 관련된 전제조건들을 1983년 및 1985년에 발표된 Becker의 이익집단모형에 응용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있어서 개인들의 이익집단 참여 및 정치적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Kristov, Lindert, and McClelland는 소득과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개인들을 고려하여 자신들이 발전시킨 이익집단모형에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유대이론 가설이 얼마나 유효한 설득력이 있는지 OECD 13개국의 1960년부터 198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의 실증분석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개선되면서 재분배 문제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동을 강화시켜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또 다른 주요한 연구는 Dougan and Snyder(1996)이다. 이들은 재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각 소득계층을 상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수준을 지닌 개인들이 재분배정책에 대하여 협력체제를 형성(a coalition formation)하는 사례를 협조적 게임(a cooperative game)으로 설명하였다. 이 협력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들 간의 거래비용(a bargaining cost)이 고려되어야 하고, 선택 가능한 정책의 범위가 민주주의 헌정체제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협조적 균형으로서 조직하는데 성공한 개인

2) Acemoglu and Robinson(2006)에서는 재분배 문제를 사례로 중산층(a middle class)의 역할이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부분적 민주제도에서 완전 민주제도로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Stiglitz(2012)는 최근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되고 있는 불황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점차 위축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가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중산층의 몰락이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들의 집합이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Kristov, Lindert, and McClelland(1992)와 Dougan and Snyder(1996)의 연구들은 재분배정책 입안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분석하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Kristov, Lindert, and McClelland(1992)가 기본적으로 Becker(1983, 1985)의 이익집단모형을 근간으로 분석하였고, Dougan and Snyder(1996)가 협조적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이익집단 형성의 내생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론적 분석모형의 관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는 Testa(2005)의 연구로 볼 수 있다. Testa(2005)는 기본적으로 정책입안자의 임무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책 선택의 결과가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정책입안자의 선호가 사회적 후생만을 고려하는 자비로운 사회계획가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며 기부금(a monetary transfer)에 대하여 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⁴⁾ Testa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공동대리인 경기(a common agency game)에서 찾았으며, 경기자들로써 주인(principals)은 투표권을 지닌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한 로비집단들이며 대리인(agency)은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최근 다양한 경제,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처방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과 상이한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서 공동대리인모형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Testa의 분석은 정책적 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서 재분배정책의 입안과정을 Dixit, Grossman, and Helpman(1997)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경우 로비집단은 정책입안자에게 기부금을 제시하면서 정책입안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재분배정책을 입안하도록 유도하는데, 여기서 기부함수는 Truthful 전략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대리인 게임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도 Truthful 기부전략(Truthful contribution strategies)을 중심으로 상이한 소득계층 간의 정치적 경쟁을 설명함으로써, 정책입안자가 선택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사회적으로 최적이지 아닌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4) 비효율적인 정책의 선택은 재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관세와 같은 무역정책 또는 환경정책 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자세한 것은 Grossman and Helpman(1994)과 Aidt(1997) 등을 참조할 것.

Testa(2005)는 한 사회의 소비자들을 배급정책에 따라 배급대상 소비자와 비대상 소비자로 나누고, 가격자유화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후생적으로 손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 보상으로써 재분배를 하는 경우를 공동대리인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중간소득계층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세율에 대하여 선호하는 세율이 상이해지는 것에 주목하고, 이 경우 중산층의 전략적인 행동이 정책입안자의 소득세정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공동대리인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Lee and Hwang(2011)의 연구에서도 공동대리인모형을 통하여 사회계획가의 정치적 이념의 실천과 이와 반대되는 선호를 지닌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 따른 재분배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정책의 방향을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Lee and Hwang(2011)의 연구와는 다른 점이다. Zheng(forthcoming)의 연구 또한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Grossman and Helpman(2001)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지만, 이익집단의 역할을 사회계획가의 후생함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형되도록 자원을 로비 활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Testa(2005)와 본 연구와는 차별적이다. 그러나 Acemoglu and Robinson(2006)이 각 이익집단들이 기부금 경쟁에서 상이한 정치력을 갖는 경우, 사회계획가 또한 각 이익집단들이 제시한 기부금을 상이하게 평가하게 된다면 선택되는 정책은 정치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입안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Zheng(forthcoming)의 해석은 Acemoglu and Robinson(2006)의 그것과 궁극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⁵⁾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은 최근 Lupu and Pontusson(20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Lupu and Pontusson은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에 상대적으로 가까울수록 재분배 문제에서 저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선진 자본주의 사회(OECD 국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였다. 이들의 실증연구에서는 중산층 투표자들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가 가설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데이터에서는 상위 50%의 소득분포의 흠어집 정도가 하위 50%의 소득분포보다 더 확연할 때 재분배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5) 이는 Acemoglu and Robinson(2006)과 Zheng(forthcoming)의 정치경제모형이 기본적으로 공동대리인 경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선택되는 정책은 모형의 균형에서 갖는 'local truthfulness'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 이익집단들의 정치력이 상이한 경우 사회계획가의 선택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확인하였다. 이익집단이 소득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실증적 증거는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자들은 소득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로비단체들의 순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50개 주(states)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주들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들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들을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분석방법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upu and Pontusson(201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소득계층 소득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 상이하므로 정치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본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정책 선택 또한 사회적 최적 수준과는 다른 수준에서 선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득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중간소득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전략 가운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을 Truthful 기부함수를 비교함으로써 선택하게 됨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각 소득계층 사이의 갈등과 정책 결정과정을 이익집단 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Bernhei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6)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대리인모형 구조 안에서 생산성이 상이한 각 소득집단들이 정치가로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책입안자에게 경쟁적으로 선거자금 기부를 약속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득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수준을 감안해 볼 때, 재분배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한 사회의 소득재분배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즉, 경제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가중평균과 비교되는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중간소득계층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므로 이익집단 정치에서의 이들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정책입안자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책 입안과정을 이익집단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재분배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든 소득계층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중간소득계층의 생산성이 저소득계층과 가까운 경우 및 고소득계층과 가까운 경우를 나누어 이들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간소득계층의 최적 소득세율이 고소득계층과

동일한 경우 중간소득계층이 독자적으로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고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임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Ⅱ절에서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 경제모형의 구조를 소개하고, 각 소득계층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최적 소득세율을 도출한다. 제Ⅲ절에서는 공동대리인 경기를 바탕으로 중간소득계층의 전략적 선택과 재분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 합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Ⅳ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Ⅱ. 기본 모형

본 논문에서는 소득수준이 다른 세 집단이 존재하는 어느 폐쇄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각 집단들은 생산성이 동일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생산성 차이는 각 집단의 소득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각 집단의 개인들은 소비와 여가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수준은 결국 이 소비자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부의 재분배정책 시행은 결국 각 개인의 후생수준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각 개인이 자신의 생산성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도 달라질 것이다.

1. 개인의 노동공급과 소비 선택

상이한 세 가지 소득계층이 존재하는 어떤 폐쇄경제를 가정해 보자. 각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개인들의 선호는 다음과 같이 소비와 노동공급의 암묵적인 효용함수로서 표시될 수 있다.

$$u_i = U(\omega_i, t, l_i), \quad i=1, 2, 3$$

여기서 ω_i 는 i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 생산성을 의미하며, 생산과정에서 이 소비자가 기여한 대가로 받는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색인 i 는 각 소득계층을 나타내고 있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서 소득도 높은 계층을 나타낸다. 따라서 계층 1은 저소득계층, 계층 2는 중간소득계층, 그리고 계층 3은 고소득계층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t \in [0, 1]$ 와 l_i 는 소득재분

배를 위한 소득세율과 i 계층의 대표적 개인의 노동공급량을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개인들이 준선형(quasi-linear)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함수형태로 표현된다.

$$u_i = c_i - \frac{l_i^{1+\nu}}{(1+\nu)} \quad (1)$$

여기서 c_i 는 i 계층의 대표적 개인의 소비지출을 의미하고 $c_i = (1-t)\omega_i l_i + b$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로부터 정부가 각 계층에 속한 개인들의 노동소득으로부터 단일비례세율 t 만큼을 징수하여 b 크기의 정액이전소득(a lump-sum transfer)을 재분배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총소비수준은 소득세 납세분이 제외된 임금소득(세후노동소득)과 정부로부터의 정액이전소득의 합으로 나타난다. 또한 파라미터 ν 는 노동공급의 비효율을 측정하고 있으며 $\nu > 0$ 을 가정한다.

한편, 각 소득계층의 개인에게 동일한 크기로 지급되는 1인당 이인지출소득 b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b = t \sum_{i=1}^3 \alpha_i \omega_i l_i \quad (2)$$

여기서 α_i 는 i 소득계층의 총인구비율을 나타내며 $\alpha_i \in (0, 1)$ 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제의 총인구수는 $\sum_{i=1}^3 \alpha_i = 1$ 로 가정한다.⁶⁾

식 (1)로부터 i 소득계층에 존재하는 대표적 개인의 최적 노동공급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_i^* = [(1-t)\omega_i]^{1/\nu}$$

이로부터 최적 노동공급량은 생산성에 비례하고 소득세율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소득세율 하에서 생산성이 높은 개인의 노동공급량 또한 높게 될 것이므로, 각 소득계층의 대표적 개인의 노동소득 수준은 $\omega_1 l_1 <$

6) 본 논의에서는 고소득계층의 인구비율(α_3)이 다른 소득계층의 인구비율보다 가장 낮은 경우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인구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omega_2 l_2 < \omega_3 l_3$ 크기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도출된 최적 노동공급량을 식 (2)에 대입해 보면 이진지출의 크기를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소득세율과 평균생산성의 함수로 나타난다.

$$b = t(1-t)^{\gamma-1} E(\omega^\gamma)$$

여기서 $\gamma = \frac{1+\nu}{\nu}$ 으로 정의하면 $\gamma-1 = \frac{1}{\nu}$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nu > 0$ 에 대하여 $\gamma > 1$ 이다. 또한 $E(\omega^\gamma) = \sum_{i=1}^3 \alpha_i \omega_i^\gamma$ 로 정의될 수 있는데, 여기서 ω_i^γ 는 세율이 0인 경우 i 계층의 대표적 개인의 노동소득이므로 $E(\omega^\gamma)$ 는 세율이 0일 때의 이 경제의 노동소득의 가중평균을 의미한다.⁷⁾ 여기서 식 (1)에서 정의된 i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의 효용함수에 포함된 이진지출과 최적 노동공급량을 각각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관례에 따라 이를 정책선호함수(a gross policy preference function)라 부르기로 한다.

$$v_i(t) = \frac{(1-t)^\gamma \omega_i^\gamma}{\gamma} + t(1-t)^{\gamma-1} E(\omega^\gamma) \quad (3)$$

2. 각 소득계층의 최적 소득세율

다음으로 위의 식 (3)에서 도출된 정책선호함수에 따라 i 계층을 대표하는 개인의 최적 소득세율을 살펴보자. 우선 식 (3)의 정책선호함수의 세율에 대하여 일계도함수 조건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v_i}{\partial t} = (1-t)^{\gamma-2} [E(\omega^\gamma) - \omega_i^\gamma + t(\omega_i^\gamma - \gamma E(\omega^\gamma))]$$

위의 일계도함수 조건으로부터 v_i 값을 극대화시키는 내부해가 존재한다면 i 소득계층의 최적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⁸⁾

7) 개인의 노동소득은 $\omega_i l_i^* = (1-t)\omega_i^\gamma$

8) 각 소득계층의 정책선호로부터 최적 소득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2계도함수 조건 또한 각각 성립해야 한다.

$$t_i = \frac{E(\omega^r) - \omega_i^r}{\gamma E(\omega^r) - \omega_i^r} \quad (4)$$

식 (4)로부터 $\gamma > 1$ 을 고려할 때, i 소득계층의 최적세율 $t_i \in (0, 1)$ 의 구체적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최적세율이 0이면, 일계도함수 값은 $E(\omega^r) - \omega_i^r$ 이 되고 이 값은 기댓값과 ω_i^r 값의 크기에 따라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소득수준으로 특징되어지는 소득분포를 지닌 사회를 고려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이 사회의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낮으며 고소득계층의 소득은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중간소득계층의 노동소득이 가중평균 노동소득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1의 경우에는 $E(\omega^r) - \omega_1^r > 0$ 을 가정하여 계층 1의 최적세율은 $0 < t_1 < 1$ 에 위치하고 그 모습은 식 (4)를 따른다. 고소득계층 3의 경우에는 $E(\omega^r) - \omega_3^r < 0$ 을 가정하여 고소득계층 3의 최적 소득세율은 $t_3 = 0$ 이 된다. 그러나 중간소득계층 2의 경우에는 ω_2^r 값의 크기에 따라 $E(\omega^r) - \omega_2^r$ 의 값이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적세율이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즉, $E(\omega^r) < \omega_2^r$ 이면, $t_2 = 0$ 이고 $E(\omega^r) > \omega_2^r$ 이면, $t_2 = \frac{E(\omega^r) - \omega_2^r}{\gamma E(\omega^r) - \omega_2^r}$ 가 될 것이다.

이처럼 중간소득계층의 최적 소득세율이 내부해를 갖는 경우 저소득계층의 최적 소득세율과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간단한 계산을 통하여 $t_1 > t_2$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간소득계층의 생산성의 위치에 따라 각 소득계층의 최적 세율의 크기는 ① $E(\omega^r) < \omega_2^r$ 인 경우, $t_1 > t_2 = t_3 = 0$ 이며, ② $E(\omega^r) > \omega_2^r$ 이면, $t_1 > t_2 > t_3 = 0$ 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세율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재분배정책을 위한 소득세율이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간소득계층의 정치적 입장이 전략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최적 세율

간결한 논의 전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함수($\Omega(t)$)를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들의 후생의 단순한 총합으로 정의되는 공리주의 형태를 고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Omega(t) = \sum_{i=1}^3 \alpha_i v_i(t)$$

이러한 공리주의 형태의 사회후생함수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 세율을 구하기 위하여 각 계층의 정책선호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Omega(t) = \frac{(1-t)^\gamma E(\omega^\gamma)}{\gamma} + t(1-t)^{\gamma-1} E(\omega^\gamma) \quad (5)$$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최적의 소득세율을 구하기 위하여 식 (5)에 대한 일계미분 조건을 구해 보면, $\Omega_t = (1-t)^{\gamma-2} t(1-\gamma) E(\omega^\gamma)$ 이다.⁹⁾ 일계미분 값으로부터 쿤-터커(Kuhn-Tucker) 조건을 고려하면 사회적 최적세율 $t^0=0$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효용이 소비에 대해서는 선형이며 노동공급 시간에 대해서는 비선형 관계에 있는 준선형함수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III. 정치경제학적 모형: 내생적 소득세율의 결정과정에서의 이익집단 정치

앞서 논의된 기본 모형에서는 각 개인의 효용함수와 사회후생함수를 설명하고 재분배정책 시행 시 각 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최적의 소득세율들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각 소득계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소득세율이 상이하다는 것은 정부의 재분배정책 시행에 대하여 생산성 수준이 상이한 각 개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설명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소득계

9) Ω_t 에서 하첨자 t 는 사회후생함수를 소득세율에 대하여 일계미분함을 나타낸다.
10) 각 개인의 효용함수가 준선형이라는 가정 대신에 소비와 노동공급(또는 여가)에 대하여 로그함수와 같은 비선형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소득세율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선형 효용함수를 고려하면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정치적 경쟁모형에서 도출되는 주요 변수들의 해는 시뮬레이션 없이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본 모형에서 개인의 효용함수를 준선형으로 가정함으로써 주요 변수들의 해를 폐쇄형(closed forms)으로 도출할 수 있다.

층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득세율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이익집단 정치모형을 고려한다.

이익집단 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ernheim and Whinston(1988)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연구에서 고려된 공동대리인 게임으로서 재분배 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세 가지 수준의 다양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는 기본 모형의 가정에 의해 각 개인들은 저소득, 중간소득 및 고소득계층 중에 하나의 계층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저소득계층에 속한 개인의 생산성은 이 사회의 평균 생산성보다 낮으므로 되도록 높은 소득재분배 수준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식 (4)를 고려해 볼 때, 생산성이 가장 낮은 개인은 되도록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자신이 재정에 공헌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 저소득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되도록 높은 소득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¹¹⁾ 그러나 기본 모형에서 설정된 고소득계층에 속한 개인들은 저소득계층에 속한 개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이 0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일단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양의 값을 갖는 소득세율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재정에 부담한 비용이 이전소득보다 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재분배정책 시행에 따른 자신의 소득 손실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설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분배와 관련된 중간소득계층의 정치적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이 이 사회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가중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upu and Pontusson(2011)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간소득계층의 노동소득이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가중평균보다 작다면(크다면), 이는 저(고)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고)소득계층이 선호하는 정책과 가까운 수준의 재분배정책이

11) 저소득계층은 높은 수준의 소득세율을 선호하지만 소득세율이 1이 되는 것은 최적이지 못하다. 이는 소득세율이 1이 되면 앞서 논의된 개인의 최적 노동공급량에서 의하면 어떤 개인도 노동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율은 오히려 개인의 노동공급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소비와 재분배를 위한 소득도 올리지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된다.

입안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될 것이다.¹²⁾ 이처럼 재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소득계층들의 전략적 입장은 공동대리인 경기를 이용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각 소득계층은 선거자금과 같은 정치적 기부행위를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므로 ‘주인(principles)’으로 고려되고, 정부는 정책입안자로서 각 소득계층에서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기부를 고려하여 자신의 목적함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수준을 선택하는 ‘대리인(agent)’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정책입안자의 목적함수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소득계층을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Grossman and Helpman(1994)에서 논의된 관세와 관련된 사례처럼 각 소득계층이 정책입안자가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자금을 동원한 로비활동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경우 정부(정책입안자, 정치가)는 한편으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애로운 사회계획가의 면모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자금을 모금하는데 노력하는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는 가정을 한다. 이 경우 정부의 목적함수($G(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t) = \theta\Omega(t) + \sum_j \varphi_j(t) \quad (6)$$

여기서 $\Omega(t)$ 는 식 (5)의 사후적 후생함수를 나타내고 $\varphi_j(t)$ 은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형성한 이익집단들로부터 제시된 자금 기부함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식 (6)에서 사회후생함수 앞에 놓여 있는 파라미터 θ 는 사회적 후생과 각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총기부금액에 대하여 정책입안자가 판단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값이 작아질수록 정책입안자는 일반 국민의 후생 수준보다는 각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모금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

12) 중간소득계층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된 자세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다음에 논의될 공동대리인 경기에서 자세히 소개될 것이다.

어서 기회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¹³⁾ 그러나 각 소득계층이 정책입안자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정치적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득세율 결정에 있어서 정책입안자의 목적함수는 자비로운 사회계획가(a social planner)의 그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로부터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0이 될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2.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경쟁: 공동대리인모형

본 항에서는 각 소득계층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각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소득세율에 근접하도록 실제 소득세율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에게 선거자금 기부를 경쟁적으로 약속하는 경우, 정치적 균형으로서 소득세율의 결정과정을 살펴본다. 재분배정책 결정과정이 공동대리인 경기로 진행된다면 균형으로 도출되는 소득세율과 기부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요약한다.

[요약 1] Bernheim-Whinston(1986)의 보조정리 2와 Grossman-Helpman(1994)의 정리 1에 따라, 재분배정책 관련 선거자금 기부경쟁 경기에서 고려되는 소득세율 t^0 와 기부함수 φ_j^0 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분경기 완전균형(a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으로 도출될 수 있다.¹⁴⁾

① 이익집단 j 의 1인당 균형기부함수 φ_j^0 는 이 개인의 소득 크기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② 관련 각 이익집단들의 기부함수 φ_j^0 가 주어진 경우, 정부는 자신의 목적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소득세율을 선택한다: $t^0 = \operatorname{argmax}_t \theta \Omega(t) + \sum_j \varphi_j^0(t)$

③ 어떤 이익집단 k 에 대해서도 균형 소득세율 t^0 는 그 이익집단의 순목적함수와 정책입안자의 목적함수를 함께 극대화시켜야 한다: $t^0 = \operatorname{argmax}_t v_k(t) - \varphi_k^0$

13) 자세한 논의는 Fredricsson and Svensson(2003)을 참조할 것.

14) 기부함수 φ_j^0 에서 하첨자 j 는 모든 소득계층들로부터 편성 가능한 이익집단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j 는 각 소득계층으로부터 조직된 이익집단일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가 비슷한 이익집단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새로운 이익집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어떤 소득계층이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이익집단을 조직하는데 구성원들 사이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세한 논의는 Olson(1965)을 참조할 것.

$$+\theta\Omega(t)+\sum_j\varphi_j^0(t)$$

④ 어떤 이익집단 k 가 제시한 기부금이 $\varphi_k^0(t)=0$ 인 경우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소득세율 t_k 는 $\theta\Omega(t)+\sum_{j\neq k}\varphi_j^0(t)$ 를 극대화시킨다.

조건 ③은 균형 소득세율과 기부함수 외에 다른 어떤 세율과 기부함수를 새로이 계획함으로써 이익집단 또는 정책입안자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양 경기자 가운데 한 경기자의 후생감소를 반드시 초래하게 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이익집단은 언제라도 기부함수를 새로이 계획하면서 정책입안자의 다른 정책 선택으로부터 후생을 증진하게 되므로 균형 상태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 ④는 이익집단 k 로부터 기부금을 약속받지 못한다면 정책입안자는 균형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익집단 k 의 후생수준을 감소시키는 정책 t_k 를 선택하게 된다는 조건이다.¹⁵⁾

이익집단 k 가 제시하는 기부함수 $\varphi_k^0(t)$ 가 연속성 가정을 만족하고, 경쟁 중인 어떠한 다른 이익집단 $j(\neq k)$ 가 제시하는 기부함수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인 경우, 균형 소득세율 t^0 근방에서 위의 조건들이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균형 소득세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②와 ③ 조건에 대한 일계도함수 조건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sum_j\nabla\varphi_j^0(t^0)+\theta\nabla\Omega(t^0)&=0 \\ \nabla v_k(t^0)-\nabla\varphi_k^0(t^0)+\sum_j\nabla\varphi_j^0(t^0)+\theta\nabla\Omega(t^0)&=0\end{aligned}$$

따라서 위의 두 조건으로부터 동시에 만족되려면, 어떠한 이익집단 k 에 대해서도, $\nabla\varphi_k^0(t^0)=\nabla v_k^0(t^0)$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결과이다. 이 조건으로부터 k 이익집단에 존재하는 대표적 개인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효용 변화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책입안자에게 제시하는 기부금 수준을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공동대리인 경기의 균형 소득세율 t^0 가 Truthful Nash 균형으로 도출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5) 정책입안자에게는 소득세율 t^0 와 t_k 는 무차별한 정책 선택이다. 따라서 균형에서 정책입안자의 선택이 t^0 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익집단 k 로부터 제시되는 기부함수 $\varphi_k^0(t)>0$ 의 존재이다. 자세한 내용은 Grossman and Helpman(2001)을 참조할 것.

$$t^0 = \operatorname{argmax}_j \sum_j v_j(t^0) + \theta \Omega(t^0) \quad (7)$$

이와 함께 균형 기부함수를 도출해 보자. 정책입안자에게는 소득세율 t^0 와 t_{-k} 는 무차별한 정책 선택이므로 균형 기부함수는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균형 소득세율 t^0 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varphi_k^0(t)$ 가 된다. 따라서 균형 기부함수 $\varphi_k^0(t)$ 는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식 (19)에 따라 정책입안자의 목적함수로부터 만족되는 $G(t^0, \varphi_k^0, \{\varphi_j^0\}_{j \neq k}) = G(t_{-k}, 0, \{\varphi_j^0\}_{j \neq k})$ 조건에서 도출될 수 있다.

3.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와 중간소득계층의 전략적 선택

본 항에서는 소득재분배 문제에서 중간소득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하여 ① 저소득계층의 이익집단 정치, ②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이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을 살펴본다. 특히, ②의 경우에는 중간소득계층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저소득계층과 협력하는 경우 및 고소득계층과 협력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그로부터 중간소득계층의 전략적 선택으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저소득계층의 이익집단 정치

정부의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하여 어떤 소득계층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에게 기부금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사회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 결과는 고소득계층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므로 소득재분배를 선호하는 저소득계층은 결국 이익집단 정치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계층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분배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선택되는 소득세율은 식 (7)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t_1 = \operatorname{argmax} \theta \Omega(t) + \alpha_1 v_1(t)^{16)}$$

16) $t_{1\Delta}$ 에서 하첨자 1Δ 는 소득계층 1집단만이 정책입안자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호 Δ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이익집단의 정체가 표기되거나

$$t_{1\Delta} = \frac{\alpha_1(E(\omega^\gamma) - \omega_1^\gamma)}{\alpha_1(\gamma E(\omega^\gamma) - \omega_1^\gamma) + (\gamma - 1)\theta E(\omega^\gamma)}$$

따라서 저소득계층만이 정책입안자에 대하여 이익집단 정치를 한다면 $E(\omega^\gamma) > \omega_1^\gamma$ 및 $\gamma > 1$ 조건에 따라서 양을 값을 갖는 소득세율($t_{1\Delta} > 0$)이 선택되는데, 이는 저소득계층이 선호하는 소득세율과 유사한 것으로 이 세율이 선택되면 이 사회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저소득 및 고소득계층의 이익집단 정치와 중간소득계층의 이익집단 정치 참여

저소득계층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세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고소득계층의 소득의 일부가 저소득계층에게 이전되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득계층 또한 이에 대응하여 경쟁적으로 정부의 소득세율 결정과정에 개입할 것이다. 이 경우 정치적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모든 경기자들이 Truthful 균형 기부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t_{1\Delta 3} = \operatorname{argmax} \theta \Omega(t) + \alpha_1 v_1(t) + \alpha_3 v_3(t) \quad (8)$$

식 (8)에서 저소득계층 1과 고소득계층 3에서 조직된 이익집단들이 정책입안자에게 기부금 약속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간소득계층으로 분류된 개인들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정치적 균형으로 선택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다.

$$\textcircled{1} E(\omega^\gamma) \geq \omega_2^\gamma \text{ 경우, } t_{1\Delta 3} = 0$$

$$\textcircled{2} E(\omega^\gamma) < \omega_2^\gamma \text{ 경우, } t_{1\Delta 3} = \frac{\alpha_2(\omega_2^\gamma - E(\omega^\gamma))}{\alpha_2(\omega_2^\gamma - \gamma E(\omega^\gamma)) + (\theta + 1)(\gamma - 1)E(\omega^\gamma)} > 0^{17)}$$

이 경우는 소득계층 1집단만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표시하므로 아무 것도 표기되지 않았다. 만일 소득계층 1집단과 소득계층 2집단이 정치적으로 연대하여 이익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는 1,2 Δ 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이들이 소득계층 3과 정치적으로 경쟁한다면 1,2 Δ 3으로 표기하며 이때 결정된 소득세율은 $t_{1,2\Delta 3}$ 으로 각각 표기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소득계층 1, 2 및 3집단이 모두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t_{1\Delta 2\Delta 3}$ 으로 표기하기로 약속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E(\omega^r) < \omega_2^*$ 인 경우, 중간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최적 소득세율은 $t_2 = 0$ 이지만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경쟁에 의하여 실제로 선택되는 소득세율이 $t_{1\Delta 3} > 0$ 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E(\omega^r) \geq \omega_2^*$ 이라면, 중간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t_2 = \frac{E(\omega^r) - \omega_2^*}{\gamma E(\omega^r) - \omega_2^*} > 0$ 이지만, 실제로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경쟁의 결과, 선택되는 소득세율은 $t_{1\Delta 3} = 0$ 이 된다.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정치적 경쟁 하에서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중간소득계층의 최적 세율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중간소득계층은 나머지 두 소득계층의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결정되는 소득세율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후생수준이 감소되므로, 결국 소득세율 결정과정에 자신들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 정치에 의하여 소득세율이 결정된다면 모든 소득계층은 재분배 문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정치적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간소득계층은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겠지만 그 방법은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중간소득계층은 전략적 고려에 따라 ① 독자적으로 이익집단을 형성하거나 ② 최적 소득세율에 대하여 비슷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이익집단과 연대를 통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논의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이익집단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인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를 살펴본 후, 이들의 노동소득 수준이 $E(\omega^r) \geq \omega_2^*$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 이들에게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한다.

1) 중간소득계층의 독자적인 이익집단 정치 참여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이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소득계층 또한 독자적으로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적 균형으로서의 소득세율은 모든 이익집단들이 Truthful 전략에 따라 경쟁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식 (7)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t_{1\Delta 3} = \operatorname{argmax} \theta \Omega(t) + \alpha_1 v_1(t) + \alpha_2 v_2(t) + \alpha_3 v_3(t) \quad (9)$$

17) 식 (8)의 일계도함수 조건으로부터 내부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t_{1\Delta 3} > 0$ 가 성립한다.

$$t_{1\Delta 2\Delta 3}=0$$

이는 식 (5)에서 살펴본 사회적으로 최적의 세율($t^s=0$)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모든 소득계층이 독자적으로 이익집단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Truthful 전략 선택에 따라 효율적인 소득세율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E(\omega^r) \geq \omega_2^s$ 경우: 저소득계층과의 정치적 협력

중간소득계층에 소속된 개인들의 생산성이 $E(\omega^r) \geq \omega_2^s$ 위치에 있는 경우, 이들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 선택 $t_{1\Delta 3}=0$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E(\omega^r) \geq \omega_2^s$ 인 경우 중간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소득세율은 $t_2 > 0$ 가 된다. 따라서 이때 중간소득계층은 소득재분배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후생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저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력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본 논의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중간소득계층의 협력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집단의 1인당 편익의 크기는 구성원들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 크기는 두 집단의 1인당 편익들의 볼록결합(convex combin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치적 협력으로 형성된 이익집단의 1인당 편익을 $(1-\lambda)v_1(t) + \lambda v_2(t)$, $\lambda \in (0, 1)$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정치적 협력으로 형성된 새로운 이익집단의 기부함수는 Truthful 기부전략에 따라 이러한 볼록결합으로 나타나는 1인당 정책선호함수가 정책입안자의 정책 선택 시 반영되도록 계획될 것이다. 이 경우 이익집단 정치로 인해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_{1,\Delta 2\Delta 3} = \operatorname{argmax} \theta \hat{\Omega}(t) + (\alpha_1 + \alpha_2) [(1-\lambda)v_1 + \lambda v_2(t)] + \alpha_3 v_3(t) \quad (10)$$

식 (10)은 Truthful 기부전략에 따라 각 이익집단들이 정책입안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치적 균형에서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나타내고 있다.¹⁸⁾ 여기서 저소득계층과 중간소득계층이 새로운 이익집단을 형성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1인당 편익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장한다면, 그 때 가능한 1인당 최대편익은 $v_{1,2}^{max} \equiv \frac{\alpha_1}{\alpha_1 + \alpha_2} v_1(t) + \frac{\alpha_2}{\alpha_1 + \alpha_2} v_2(t)$ 이므로 $v_{1,2}^{max} \geq (1-\lambda)v_1(t) + \lambda v_2(t)$ 의 조

18) 식 (10)에서 사회후생함수는 $\hat{\Omega}(t) = (\alpha_1 + \alpha_2) [(1-\lambda)v_1(t) + \lambda v_2(t)] + \alpha_3 v_3(t)$ 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소득세율은 0이 아니다.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lambda \geq \frac{\alpha_1}{\alpha_1+\alpha_2}$ 가 된다.¹⁹⁾ 이를 고려할 때, 식 (10)의 일계미분 조건을 이용하여 정치적 협력에 따른 최적 세율 $t_{1,2\Delta 3}$ 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_{1,2\Delta 3} = \begin{cases} \frac{(\alpha_2 - \alpha_1\lambda - \alpha_2\lambda)(\omega_2^y - \omega_1^y)}{(\alpha_2 - \alpha_1\lambda - \alpha_2\lambda)(\omega_2^y - \omega_1^y) + (\gamma - 1)E(\omega^r)} > 0, & \left(1 - \lambda > \frac{\alpha_1}{\alpha_1 + \alpha_2}\right) \\ 0 & , \left(1 - \lambda = \frac{\alpha_1}{\alpha_1 + \alpha_2}\right) \end{cases} \quad (11)$$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1-\lambda > \frac{\alpha_1}{\alpha_1+\alpha_2}$ 인 경우에는 최적 세율은 $t_{1,2\Delta 3} > 0$ 가 되므로 중간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과 협력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1-\lambda = \frac{\alpha_1}{\alpha_1+\alpha_2}$ 인 경우에는 식 (10)과 식 (9)가 동일하게 되어 $t_{1,2\Delta 3} = t_{1\Delta 2\Delta 3} = 0$ 이 되므로 중간소득계층에게는 저소득계층과 협력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중간소득계층의 개인들에게는 식 (11)에 제시된 균형 소득세율($t_{1,2\Delta 3} > 0$)이 선택되는 것이 $t=0$ 세율 하에서 재분배 없이 자신들의 노동소득으로만 소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살펴보자. 중간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과 정치적 연대를 한다면, 이에 따른 1인당 정책선호함수는 식 (10)에 따라 $v_{1,2}(t_{1,2\Delta 3}) = (1-\lambda)v_1(t_{1,2\Delta 3}) + \lambda v_2(t_{1,2\Delta 3})$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Truthful 전략에 따른 1인당 기부함수는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는다.

$$\varphi_{1,2}(t_{1,2\Delta 3}, B_{1,2}) = \max[0, v_{1,2}(t_{1,2\Delta 3}) - B_{1,2}]$$

여기서 $B_{1,2}$ 는 중간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과 연대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순편익(또는 순보수)의 크기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중간소득계층의 문제는 이 순편익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목적 또한 정치적인 각 계층들이 Truthful 전략에 따라 경쟁적으로 기부를 제안하는 경우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계층이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9) 그러나 만일 두 집단 간의 정치적 연대 형성에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1-\lambda \geq \frac{\alpha_1}{\alpha_1+\alpha_2}$ 조건만 성립하여 식 (11)의 최적 세율은 항상 0보다 클 것이다.

$$\max B_{1,2}, \text{ s.t. } G(t_{1,2\Delta 3}, B_{1,2}) \geq G(t, B_{1,2})$$

여기서 $G(t, B_{1,2}) = (\alpha_1 + \alpha_2)\varphi_{1,2}(t, B_{1,2}) + \alpha_3\varphi_3(t, B_3^{1,2\Delta 3}) + \theta\Omega(t)$. 전략적으로 협조관계에 있는 이 두 계층의 문제는 경쟁관계에 있는 고소득계층이 Truthful 균형전략에 따라 1인당 균형 순편익의 크기를 $B_3^{1,2\Delta 3}$ 로 결정한 경우 자신들 또한 정치적 기부에 따른 순편익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계층의 정치적 연대로 이루어진 이익집단은 정책입안자가 균형정책 $t_{1,2\Delta 3}$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기부함수를 고려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순편익의 크기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Bernheim and Whinston(1986)의 Theorem 2에 따라 두 계층의 연대로 이루어진 이익집단의 기부함수를 고려해 보자. 우선 이 이익집단으로부터의 기부가 없으며 이들과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고소득계층만 Truthful 전략에 따라 기부를 한다면 정책입안자는 $t_{1,2\Delta 3}$ 이외에 고소득계층이 더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t_{\Delta 3} = \operatorname{argmax} \alpha_3\varphi_3(t, B_3^{1,2\Delta 3}) + \theta\Omega(t) \quad (12)$$

식 (12)에 따라 $t_{\Delta 3}$ 이 정의된다면, 이 두 계층의 연대로 형성된 이익집단으로부터 정책입안자에게 제시되는 정치적 기부함수는, 이익집단들이 모두 Truthful Nash 균형 기부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Grossman and Helpman(199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될 것이다.

$$\begin{aligned} & (\alpha_1 + \alpha_2)\varphi_{1,2}(t_{1,2\Delta 3}, B_1^{1,2\Delta 3}) + \alpha_3\varphi_3(t_{1,2\Delta 3}, B_3^{1,2\Delta 3}) + \theta\hat{\Omega}(t_{1,2\Delta 3}) \\ & = \alpha_3\varphi_3(t_{\Delta 3}, B_3^{1,2\Delta 3}) + \theta\Omega(t_{\Delta 3}) \end{aligned}$$

위 조건을 Truthful 기부전략에 따른 1인당 기부함수를 고려하여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alpha_1 + \alpha_2)(v_{1,2}(t_{1,2\Delta 3}) - B_1^{1,2\Delta 3}) + \alpha_3(v_3(t_{1,2\Delta 3}) - B_3^{1,2\Delta 3}) + \theta\hat{\Omega}(t_{1,2\Delta 3}) \\ & = \alpha_3v_3(t_{\Delta 3}) - \alpha_3B_3^{1,2\Delta 3} + \theta\Omega(t_{\Delta 3}) \end{aligned} \quad (13)$$

그런데 만일 정책입안자의 정책 선택이 $t_{\Delta 3}$ 세율이라면, Truthful Nash 균형 하에서는 두 계층의 연대로 탄생된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기부는 당연히 0 수준이 될 것이고, 이 경우 $v_{1,2}(t_{\Delta 3}) \leq B_{1,2}^{1,2\Delta 3}$ 의 조건이 요구된다.²⁰⁾ 이 함의를 이용하여 위 전개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alpha_1 + \alpha_2)v_{1,2}(t_{1,2\Delta 3}) + \alpha_3v_3(t_{1,2\Delta 3}) + \theta\widehat{\Omega}(t_{1,2\Delta 3}) \\ & \geq \alpha_3v_3(t_{\Delta 3}) + \theta\Omega(t_{\Delta 3}) + (\alpha_1 + \alpha_2)v_{1,2}(t_{\Delta 3}) \end{aligned}$$

위 관계 부등식을 정의에 따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heta + 1)[(\alpha_1 + \alpha_2)(1 - \lambda)v_1(t_{1,2\Delta 3}) + (\alpha_1 + \alpha_2)\lambda v_2(t_{1,2\Delta 3}) + \alpha_3v_3(t_{1,2\Delta 3})] \\ & \geq [(\alpha_1 + \alpha_2)(1 - \lambda) + \alpha_1\theta]v_1(t_{\Delta 3}) + [(\alpha_1 + \alpha_2)\lambda + \alpha_2\theta]v_2(t_{\Delta 3}) + \alpha_3v_3(t_{\Delta 3}) \end{aligned} \quad (14)$$

그런데 식 (13)으로부터 계층 간 협력으로부터 형성된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부가 양의 값을 갖는다면 이들의 순편익과 관련하여 다음 항등식을 전개해 볼 수 있다.

$$\begin{aligned} & (\theta + 1)[(\alpha_1 + \alpha_2)(1 - \lambda)v_1(t_{1,2\Delta 3}) + (\alpha_1 + \alpha_2)\lambda v_2(t_{1,2\Delta 3}) + \alpha_3v_3(t_{1,2\Delta 3})] \\ & - (\theta + 1)[\alpha_1v_1(t_{\Delta 3}) + \alpha_2v_2(t_{\Delta 3}) + \alpha_2v_3(t_{\Delta 3})] \\ & = (\alpha_1 + \alpha_2)B_{1,2}^{1,2\Delta 3}\alpha_1v_1(t_{\Delta 3}) - \alpha_2v_2(t_{\Delta 3}) \end{aligned} \quad (15)$$

식 (15)의 좌변은 식 (14)의 부등식을 고려해 보면 0보다 큰 값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alpha_1 + \alpha_2)B_{1,2}^{1,2\Delta 3}\alpha_1v_1(t_{\Delta 3}) - \alpha_2v_2(t_{\Delta 3}) \geq 0$$

그러므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율 결정과정에서 중간소득계층이 저소득 계층과 협력함으로써 형성된 새로운 이익집단을 통하여 고소득계층과 정치적 기부금 경쟁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집단 전체의 순보수(net payoff)의 크기가 정치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순보수의 크

20) 자세한 내용은 Grossman and Helpman(1994)를 참조할 것.

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론은 Menu auction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순편익이 크도록 게임을 설명한 바 있는 Bernheim and Whinston(1986)의 Theorem 2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중간소득계층의 생산성 수준이 $E(\omega^y) > \omega_2^y$ 인 입장에 있는 경우, 저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력하여 정치자금 기부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보다 순편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E(\omega^y) < \omega_2^y$ 경우: 고소득계층과의 정치적 협력 또는 독자적 이익집단 정치 참여

중간소득계층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 (ω_2^y) 수준이 이 사회의 세율 0 하에서의 노동소득의 가중평균 ($E(\omega^y)$)보다 큰 경우 중간소득계층이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만 서로 정치적 경쟁을 한다면 정부의 정책 선택은 $t_{1\Delta 3} > 0$ 이다. 그러나 $E(\omega^y) < \omega_2^y$ 인 경우에 중간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소득세율은 $t_2 = 0$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중간소득계층은 소득재분배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정치적으로 고소득계층과 연대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②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이익집단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입안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Truthful 전략에 따라 기부경쟁을 한다면 정책입안자가 선택하는 소득세율 선택은 $t_{1\Delta 2\Delta 3} = 0$ 이 된다. 반면 ①의 경우 역시 $t_{1\Delta 2\Delta 3} = 0$ 이 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을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경우에서 얻을 수 있는 순보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더 큰 경우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①이 $t_{1\Delta 2\Delta 3} = 0$ 이라는 최적세율을 달성할 수 없다면 중간소득계층은 항상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협력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집단의 1인당 편익의 크기는 구성원들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므로 이 경우 역시 그 크기를 두 집단의 1인당 편익들의 볼록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정치적 협력으로 형성된 이익집단의 1인당 편익은 $(1-\lambda)v_2(t) + \lambda v_3$, $\lambda \in (0, 1)$ 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이익집단 정치로 인해 결정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t_{1\Delta 2,3} = \operatorname{argmax} \theta \tilde{\Omega}(t) + \alpha_1 v_1(t) + (\alpha_2 + \alpha_3) [(1-\lambda)v_2(t) + \lambda v_3(t)] \quad (16)$$

식 (16)은 Truthful 기부전략에 따라 각 이익집단들이 정책입안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치적 균형에서 결정되는 균형 소득세율을 나타내고 있다.²¹⁾ 그런데 두 집단이 새로운 이익집단을 형성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1인당 편익을 누린다면, 그 때 가능한 최대 1인당 편익은 $v_{2,3}^{max} \equiv \frac{\alpha_2}{\alpha_2 + \alpha_3} v_2(t) + \frac{\alpha_3}{\alpha_2 + \alpha_3} v_3(t)$ 이므로 $v_{2,3}^{max} \geq (1-\lambda)v_2(t) + \lambda v_3(t)$ 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lambda \geq \frac{\alpha_2}{\alpha_2 + \alpha_3}$ 가 된다.²²⁾ 이를 고려할 때, 식 (16)의 일계미분 조건을 이용하여 정치적 협력에 따른 최적세율은 $t_{1\Delta 2,3}$ 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_{1\Delta 2,3} = \begin{cases} \frac{(\alpha_3 - \lambda\alpha_2 - \lambda\alpha_3)(\omega_3^y - \omega_2^y)}{(\alpha_3 - \lambda\alpha_2 - \lambda\alpha_3)(\omega_2^y - \omega_1^y) + (\gamma - 1)E(\omega^y)} > 0, & \left(1 - \lambda > \frac{\alpha_2}{\alpha_2 + \alpha_3}\right) \\ 0 & , \left(1 - \lambda = \frac{\alpha_2}{\alpha_2 + \alpha_3}\right) \end{cases} \quad (17)$$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1 - \lambda > \frac{\alpha_2}{\alpha_2 + \alpha_3}$ 인 경우에는 최적세율은 $t_{1\Delta 2,3} > 0$ 이 되므로 중간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과 협력할 유인이 없으며, $1 - \lambda > \frac{\alpha_2}{\alpha_2 + \alpha_3}$ 인 경우에는 식 (16)과 식 (9)가 동일하게 되어 $t_{1\Delta 2,3} = t_{1\Delta 2\Delta 3} = 0$ 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중간소득계층에게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해진다. 따라서 중간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과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1인당 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때이며, 이마저도 중간소득계층이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와 다른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21) 식 (16)의 사회후생함수는 $\tilde{\Omega}(t) = \alpha_1 v_1(t) + (\alpha_2 + \alpha_3) [(1-\lambda)v_2(t) + \lambda v_3(t)]$ 로 정의된다.

22) 만일 두 집단 간의 정치적 연대 형성에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1 - \lambda > \frac{\alpha_2}{\alpha_2 + \alpha_3}$ 조건만 성립하여 최적 세율은 0보다 클 것이다. 이 경우 식 (16)의 최적 세율은 항상 0보다 크므로 중간소득계층은 고소득계층과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IV. 요약 및 결어

소득불평등 정도의 심화는 소득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외부불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이 멈추어지고 중간소득계층이 점차 공동화되면서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도 함께 붕괴되는 등 그 여파가 사회 및 경제, 심지어는 국가 정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공권력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부과와 세율 결정 문제는 역사적으로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인 시민들과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매우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재분배정책 결정과정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과 Lupu and Pontusson(2011)의 실증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재분배 문제에서 다양한 소득집단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집단행동에 호소하는 이익집단 정치과정에서 가능한 정책적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Bernheim and Whinston(1986) 및 Grossman and Helpman(1994)을 따라서 공동대리인모형을 이용하여 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율 결정과정에서 각 소득계층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하여 정책입안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저소득계층은 높은 세율을 선호하고 고소득계층은 재분배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여가에 관한 준선형 효용함수를 가정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의 소득을 또한 고소득계층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t^a = t_3 = 0$)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는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과 가까운 경우 독자적으로 이익집단 정치에 호소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저소득계층과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보였다. 반면 중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의 소득수준과 가까운 경우 중간소득계층에게는 고소득계층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무차별해지므로 고소득계층과의 정치적 연대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저소득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고소득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면서 바람직한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상대적 소득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중산층의 소득 향상이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정책 시행에 있어서 중산층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유인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저소득 및 고소득계층의 정치적 경쟁 하에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대리인모형을 이용하여 재분배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계층들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Lupu and Pontusson(2011)과 같은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시사점들을 이론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참 고 문 헌

- Acemoglu, D. and J. A. Robinson,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Adit, T. S., "Political Internalisation of Economic Externalities and Environmental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 1998, 1~16.
- Becker, G.,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 1983, 371~400.
- _____, "Public Policies, Pressure Groups, and Dead Weight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8, 1985, 329~347.
- Bernheim, B. D. and M. D. Whinston, "Menu Auctions,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 1986, 1~31.
- Dixit, A., G. M. Grossman, and E. Helpman, "Common Agency and Coordination: General Theory and Application to Government Policy Ma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4), 1997, 752~769.
- Dougan, W. R. and J. M. Snyder, "Interest-Group Politics under Majority Rul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1996, 49~71.

- Grossman, G. M. and E. Helpman, "Protection for Sal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1994, 833~850.
- _____, *Special Interest Politics*, MIT Press, 2001.
- Fredriksson, P. G. and J. Svensson, "Political Instability, Corruption and Policy Formation: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2003, 1383~1405.
- Lee, J. K. and U. Hwang, "Interest Politics driven Redistribution," unpublished paper, 2011.
- Lupu, N. and J. Pontusson, "The Structure of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 2011, 316~336.
- Kristov, L., P. Lindert, and R. McClelland, "Pressure Groups and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 1992, 135~163.
- Meltzer, A. and S. Richard,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1981, 914~927.
-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vard University Press, 1965.
- Persson, T. and G. Tabellini, *Political Economics*, MIT Press, 2000.
- Roberts, K., "Voting over Income Tax Schedul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 1977, 329~340.
- Roemer, J. E., "Why the Poor do not Expropriate the Rich in Democracies: A New Argu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 1998, 399~424.
- Shughart, W. F., R. D. Tollison, and Z. Yan, "Rent Seeking into the Income Distribution," *Kyklos*, 56, 2003, 443~458.
- Stiglitz, J., *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Inc., 2012.
- Testa, C., "Reforms, Lobbies and Welfare: A Common Agency Approach," *Public Choice*, 125, 2005, 305~337.
- Zheng, M., "Lobbying for Wealth Redistribution by Changing the Social Planner's Preferenc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forthcoming.

[Abstract]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Decided through Political Processes and Strategic Choices of the Middle Class*

Jinkwon Lee** · Uk Hwang***

This study analyzes from 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responses of diverse income classes to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pursued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ccording to implications presented by empirical studies such as those of Shughart, Tollison, and Yan(2002) as well as Lupu and Pontusson (2011). The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strategic choices that can be made by the middle class for the balanced income tax rate decided throug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ach income class interest group based on the common agency model of Grossman and Helpman(1994). This study analyzes that when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the middle class is small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income classes (when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low class before taxation), the two classes cooperating to exercise political influence on policy makers is the best choice for the middle class during decision-making of its income tax rate. On the other hand, when it is great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labor income before taxation of all classes (relatively closer to the labor income of the high class), taking the strategy of either cooperating with the high class or independently exercising political influence is indifferent.

Keywords: income redistribution, income taxation, middle class, interest group politics, common agency

JELClassification: I38, H23, D31, D72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el: +82-2-705-8511, E-mail: jlee22@sog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el: +82-53-950-7430, E-mail: uh202@knu.ac.kr